

여전한 '조국 국감'

여야, 장학금·논문 의혹 등 14개 위원회에서 곳곳 충돌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초반에 중반으로 넘어가는 10일에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놓고 전방위적으로 충돌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등 총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진행했는데 다수의 상임위에서 조 장관을 놓고 날선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 가운데 가장 이목이 집중된 곳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였다. 조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들과 연관이 있는 피감기관들에 대한 국감이 실시됐기 때문이다. 야권은 조 장관 의혹들을 집중하게 파헤치면서 총공세를 펼쳤다. 교육위원회에선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는데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 문제 등이 쟁점이 됐다. 시작부터 진통이 상당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 자녀의 장학금 수령 의혹과 관련해 지도교수 추천서, 신청서 작성 내역, 장학

금 지급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인 실험실 출입 특혜의혹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등 맞불을 놓았다. 한국당은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인턴 논란과 관련해 고등학생 인턴을 본 사실이 있는지, 인터넷에 공고를 한 것이 맞는지 등을 캐물으면서 공세를 강화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공익인권법센터가 아닌 조국 일가를 위한 사익인 관법센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와 관련한 논란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그는 오세정 서울대총장을 향해 나 원내대표의 아들인 김모씨가 미국 세인트 폴 고교 재학 중 서울대 의대 소속 윤모 교수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예일대 입학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를 쏟아냈다. 한국연구재단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조국 장관 자녀의 논문 제1저자 등

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을 향해 조 장관의 자녀가 수행했다고 하는 신생아의 유전자 분석 관련 연구에 대해 연구 윤리 및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상속세 납부 문제가 거론됐다. 엄용수 한국당 의원은 국세청 국감에서 정 교수가 모친에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여부를 캐물었다. 이에 김현준 국세청장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무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는데 야당에선 조 장관의 업무수행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과 이해충돌이 이뤄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에선 "의혹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해충돌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무위에선 또 손해된 의원 부친의 훈장 수여 논란, 하재현 예비역 중사의 공상 판정 논란 문제도 거론됐다. 감사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여당이 조국 장관 문제를 거론하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조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며 "정치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에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친인척 해외 이주, 서울시 태양광 보급 사업 특혜 논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김윤호 기자

"자신감 있다"는 유승민...창당 위해 넘어야 할 고비 3가지

미국행 안철수 동참 여부 관건...안 "고민해 보겠다" 孫, 비례대표 출당 "불가"...창당 비용 등도 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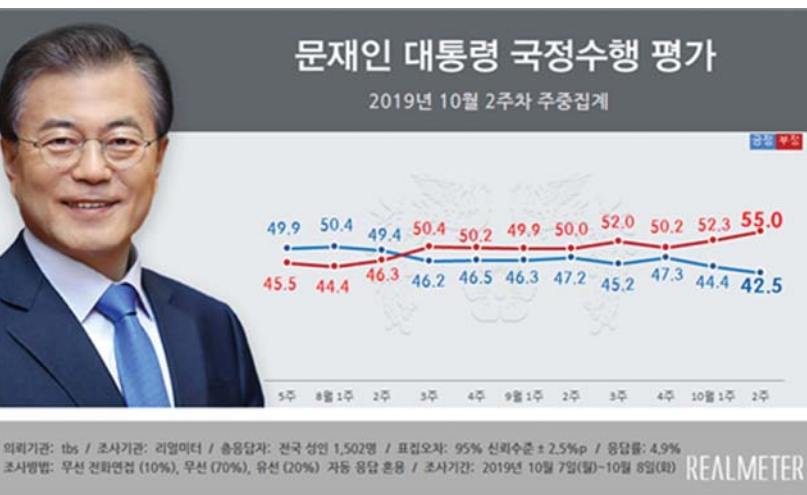


바른미래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유승민 대표 행보에 탄력이 붙고 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탈당 후 신당 창당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변혁은 아직 향후 행보에 대해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지만, 변혁 내부에 따르면 유 대표의 입장은 확실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퇴진파로서 원내대표 교체·혁신위원회 기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했지만 한계에 부딪혔고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유 대표는 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신당 창당이 유력한 옵션 아닌가"라며 "나는 자신감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 대표가 탈당 후 신당 창당을 감행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고비들이 많다.

우선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의 동참 여부가 쟁점이다. 유 대표는 신당 창당의 명분으로 바른미래당 창당 정신을 내걸었다. 유 대표와 안 전 대표의 통합 선언문인 '합리적 중도와 개혁적 보수'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의미다. 이 명분에 따르면 안 전 대표 합류는 중요하다. 그러나 안 전 대표는 커져가던 정계복귀설을 뒤로하고 미국으로 향했다. 유 대표는 안 전 대표와 직접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안 전 대표는 여전히 "고민 좀 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철수 전 대표측 비례대표 의원들의 참여 여부도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바른미래당 출신(유승민계)들은 모두 지역구 의원들이며 변혁 내 비례대표들은 전부

안철수계 의원들이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탈당하면 의원직 상실하게 된다. 의원직 상실 없이 당적을 바꾸기 위해선 출당 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당권을 쥐고 있는 손 대표가 이를 허락해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또 탈당해 창당을 하려면 중앙당 및 시도당 대회를 거쳐야 하는 등 당 조직을 새로 정비해야 하는 데 이 과정에서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치르기 위한 비용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다. 게다가 탈당할 경우 8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되는 바른미래당의 자산을 두고 나와야 하는 처지이다.

문대통령 국정지지율 42.5%...조국·北 이슈에 2주째 취임후 최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2주째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 주 40%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하락했다. 부정평가 역시 2주째 최고치를 경신하며 5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10월2주차 주중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42.5%로 전주대비 1.9%p포인트(p) 하락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5.0%로 같은기간 2.7%p 올랐다. 매우 잘못한다는 응답이 43.3%, 잘못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11.7%였다. 긍정 평가 격차는 한 자릿수(지난주 7.9%p)에서 두 자릿수(12.5%p)로 벌어졌다. 7일 일간집계만 따로 보면 긍정평가가 42.2%, 부정평가가 55.0%로 각각 취임 후 일간 최저치와 최고치를 경신했다. '모름·무응답'은 전주 대비 0.8%p 감소한 2.5%로 집계됐다. 리얼미터 측은 "조국 법무부장

박지원 "검찰, 조국동생 영장 재기각시 진짜 멘붕"

박지원 무소속 의원(대안신당)은 10일 조국 법무부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 "검찰이 조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시 조 장관 동생 조권씨에 대한 검찰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영장이) 한 번 기각되면 계속 기각되더라"며 "(재

평장히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여준의 뉴스공장'에서 전날 조 장관 동생 조권씨에 대한 검찰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영장이) 한 번 기각되면 계속 기각되더라"며 "(재

청구 영장이 기각되면) 그렇게 됐을 때 검찰은 진짜 멘붕(멘탈붕괴) 상태"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검찰로서 평장이 당혹스러울 것"이라며 "수사 검사들은 굉장히 재정구를 하자고 요구하겠지만 상충부는 또 기각되는 경우를 가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뉴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중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분 한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년 단 736 상속한정승인
사망자: 정기순 (490620-2626813)
최후주소: 순천시 신월로길 54, 501동 90호(조례동, 주공아파트)
등록기준지: 서울 강북구 삼양로173길 116의 28

위망 정기순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할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9년 10월 11일

공고인: 권방모, 권은정.
주소: 광주 북구 송월로40번길 45-3, 303호(오치동)
순천시 수박동2길 21, 104동 1005호(생목동, 현대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2019년 10월 4일
공고기간: 2019. 10. 11 ~ 2019. 12. 11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 원청의 안전: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범위에 명백해 되었습니다.
- 정시간근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노·사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남에는 노사민정 세력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끼리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무료 지원해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등 각종 노동쟁의, 노동문제로 애로사항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 등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노사갈등조정지원실운영위원회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